

‘장그래’가 부럽다…장애인 청년 취업률 3.9%

〈‘미생’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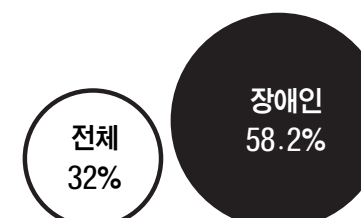


■ 장애인 고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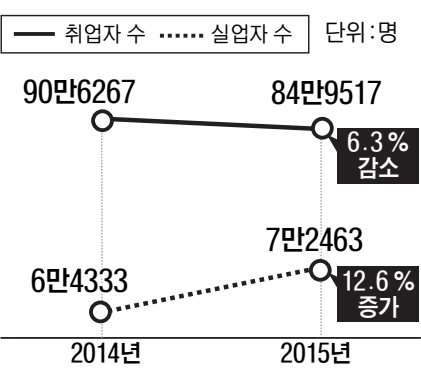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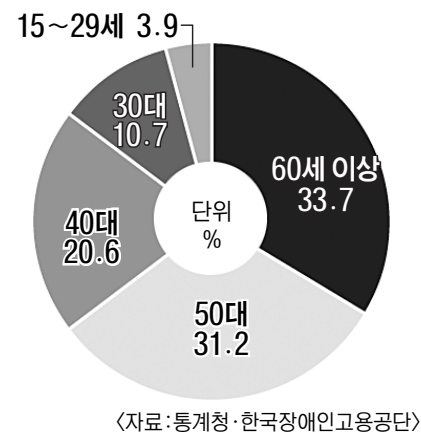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취업자·실업자 수



■ 연령대별 취업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 직원은 소장을 포함해 9명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권 확대는 고작 1명이 총원됐을 뿐이다.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광주인권사무소 이용근 소장은 “지역 인권사무소의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장애인차별사건 조사권 부여와 지역 장애인차별 시정 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요구에 부합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 14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북구청소년수련관 제공〉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위원회 첫발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관장 강병연)은 제14기 청소년운영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들의 욕구충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

신임 청소년운영위원들은 건전한 자치활동 강화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들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운영위원들은 수련관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운서(문정여고 1)양이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로, 조동근(자연과학고 2)군이 부대표, 임지원(문화중 2)양이 서기로 선출됐다. 이들은 매달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임시의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자문 등 활동을 하게 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서구,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광주시 서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구가 진행하는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임신 20주 이상 34주 미만 임산부 가운데 조기진통, 분만출혈, 임신중독증 관련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임산부 가정이다. 서구는 임산부 본인 부담금 50만원 초과분(최대 3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며 올해 예산으로 5800만원을 확보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광주 서구청 보건소 출산장려팀(062-350-4138, 4720)으로 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만혼, 늦은 출산 등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다”면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적정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사회적 약자 탐방행사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청소년 탐방프로그램은 유치부 ‘무등산 숲 학교’, 초등부 ‘무등포 방과후학교’, 중등부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등 참가연령에 따라 구분된다.

동부사무소 측은 자연체험 기회가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아도

피·소아암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

알콜·약물 중독, 가정해체,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시민과 학생에게는 사회적 중진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숲 건강 체험과 환경교육을 병행하는 탐방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월별 지속참여형·당일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김형호기자 khh@

2015 장애인 경제활동 보고서

실업자 7만명…12.6% 증가

근로자 58%가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의 75% 수준

장애인들의 고용률과 고용 여건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여전히 나쁘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경우 장애인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74만7000원으로, 지난해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31만4000원의 75.5%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40%가 넘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더욱 열악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227만4000원 수준으로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임시근로자(90만7000원)와 일용근로자(109만1000원)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27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이 12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가 308만9000원으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66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규직 여부별로는 정규직근로자 254만2000만원, 비정규직근로자 117만1000원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8.2%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32%)보다 26.2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도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 수는 84만9517명으로 2014년(90만6267명) 보다 6.3%나 떨어진 등 장애인 취업자 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85만5158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장애인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3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50대(31.2%), 40대(20.6%), 30대(10.7%) 순으로 조사됐다.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의 전체 연령대별 취업률은 3.9% 수준에 머물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절반에 가까운 44.5%를 차지했고, 고졸 35%, 대졸 20.5%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은 42.6%에서 37.6%로 감소했고, 정신적장애인의 고용률은 23.2%로 18.4%로 하락했다. 남성의 고용률은 44.7% 수준이었지만 여성은 21.0%에 그쳤다.

반면 장애인 실업자 수는 2014년 6만4333명에서 2015년 7만2463명으로 12.6%나 늘었다. 2010년(6만599명) 이후 5만~6만명 대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7만명 대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시점이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5~7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광주인권사무소, 국가기관·학교 인권침해도 조사

인력 부족 우려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용근)가 개소 10년 만에 장애인과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학교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조사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2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인권사무소 조사권 확대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0월 문을 연 광주인권사무소는 그동안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내 교정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

체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만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권 확대 방침에 따라 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 사건, 장애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조사를 시행한다.

2001년 11월 2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7만6769건이다.

이중 국가기관 99건, 각급 학교 34건, 공직유관기관 27건이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업무

를 진행했다.

조사권 확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개선’ 정책으로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행위와 관련 현장 접근성을 강조하고 조사의 신속성을 강화한 데에 따른 것이다.

또 올해 하반기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사각지대인 경찰과 군에 대한 조사업무도 지역 사무소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사권은 확대됐지만 인력 부족에 대한

회사 사정상 급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후 20억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